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4월 13일(월)
통권35호(제2권 제13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Ⅱ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연속기획 「북한경제를 진단한다」 《Ⅱ.2002년 7.1 조치 이전의 북한경제》

지금이야 한국이 북한에 비해 경제 수준이 월등히 앞서지만 예전에는 그 반대였다. 70년대 초반 혹은 전문가에 따라서는 중반까지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에 비해 앞서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냉전 구조 속에서 GATT와 코멘콘으로 진영을 이루며 자본주의와 대치하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중진국 수준의 공업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점만 보더라도 당시 북한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예로 지하철의 경우, 완공 시기만 하더라도 한국은 1974년 8월이었지만 북한은 이보다 1년 가까이 이른 1973년 9월이었다. 공법 면에서도 북한의 지하철 궤도는 보통 지하 100~120m로 건설되어, 남한보다 훨씬 난공사를 거쳐 완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으로 남한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폐허 속에서도 급격히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는 공통된 사항이 있다. 우선 ‘천리마 운동’으로 상징되는 노력동원 체계의 성공이다.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한 내부 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력은 인적 자원뿐이었다. 주민들의 경이로운 노력동원 덕분에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57~61)의 목표를 전 부문에 걸쳐 예정보다 1년 앞당겨 4년 만에 달성할 수 있었다.

둘째, 강력한 중앙권력을 바탕으로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시점에서 북한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시 북한 경제의 제1 과제가 전후 복구라는 점에서 경제규모가 크고, 복잡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계획 입안과 추진에 필수적인 관리지표의 수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표 간의 연관성이나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고, 단순할 때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가 무정부적 시장경제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냉전 본격화에 따른 국제 역학의 수혜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 등 남방의 자본주의 진영에게 한국이 소련과 중국 등 북방의 사회주의 진영과의 완충지로 전략적 가치가 있음을 이해한다면 북방의 사회주의 진영에게도 북한이 남방의 자본주의 진영과의 완충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해 외부의 자원 공급이 절실한 북한에게 이러한 국제정세에 힘입은 소련과 중국의 대규모 지원과 사회주의 우호가격의 과적

적 적용 등은 달리는 천리마에 날개까지 달아주었다.

이러한 내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통해 북한의 경제는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중앙집중 계획경제 하에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70년대 지나면서 과거 북한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동력들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요소로까지 작용했다.

먼저 전후 경제 부흥의 주요 동력이었던 노력동원 체계는 아무리 주민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북돋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후 북한이 1976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필두로 ‘80년대 속도’, ‘90년대 속도’ 등을 정력적으로 전개했지만 경제 성장은커녕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경제난에 빠지게 됐다. 이런 사실은 인적 자원의 1차적인 노력이 경제 발전에 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과학기술을 필두로 하는 물리적 생산력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은 담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도시화시킨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제어하기 힘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7.1조치를 실시하며 내세웠던 무사안일과 같은 평균주의의 폐해는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 계획 입안에서는 생산 계획의 축소 보고가, 계획 집행에서는 생산량지표 방식에 따른 자원의 축장과 낭비가 일상화됐다. 경제 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관리지표의 종류와 숫자는 슈퍼컴퓨터로도 처리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민간의 사경제 등 계획경제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비공식경제 부문은 농민시장의 장마당화처럼 국가권력도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성장했다.

여기에 더해 70년부터 시작된 대탕트 분위기와 특히 80년대 후반 폭풍처럼 몰아친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봉쇄를 가했고, 이에 북한도 ‘자주’를 내세워 자립경제 체제를 강화했다. 물론 코멘콘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이를 뒷받침할 때는 자본주의 진영의 봉쇄가 결정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등 코멘콘의 해체와 한중 수교에 따른 중국의 이반은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제반의 요소가 모여 80년 중반 이후 북한 경제의 위기는 시작됐고, 마침내 그 폭발은 90년대 중후반 대규모의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고난의 행군’으로 나타났다.

제35호 목 차

이주의 칼럼

‘PSI 참여’ 신중해야 한다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로켓 발사에 경험주↑...방산주↓ 3

부산~나진 北 정기화물선 정상운항 4

[北 로켓발사 이후] PSI가입 실효성 논란 5

'평양 아파트 10만 가구 건설' 스타트 6

北, 내각서 민경협 제외...경색장기화 예고 7

북한 올해 예산은 5.2%증액된 34.5억 달러로 추산 8

"남·북·중 3각경협 한국에 새 블루오션" 9

유엔 안보리 6개국, 對北 의장성명 채택합의 10

After Latest Brinkmanship, Engaging North Korea 11

ミサイル発射 議長声明で收拾も 日米目指す決議は困難か 12

추천논문 / 글로벌 경제위기 하의 남북경협 방향 13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3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경실련통일협회 2009년 1차 정책토론회
▶주제: 북 인공위성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 PSI 전면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9년 04월 14일(화) 14:00

▶장소 : 경실련 강당 2층

● 평화재단 제30차 전문가포럼

▶주제: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 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일시 : 2009년 04월 14일(화) 14:00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08 학진 기초연구 과제지원 제1차 학술회의

▶주제: 북한의 남한연구

▶일시 : 2009년 04월 15일(수) 14:00

▶장소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이 주의 칼럼

‘PSI 참여’ 신중해야 한다

신우용(군사평론가)

북한이 1998년과 2006년에 이어 3번째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할 당시 1620km였던 사거리를 3200km로 두 배 늘리는 데 10년이 걸렸다. 북한은 98년 이후 기술력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계속 장거리 로켓 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북한의 대미 전략적 가치가 핵무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욱 커지는 것처럼 이를 운반할 장거리 운반체를 보유하고 있을 때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배경에는 어떻게든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열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미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다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음은 물론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도 견제할 수 있다.

2000년부터 5년간 북한은 이란·시리아·리비아·파키스탄 등 중동지역 7개국에 1억7000만달러의 미사일을 수출했는데 이는 북한 해외 무기수출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적 기대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93년 5월 노동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함으로써 독자기술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기술이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가우리(고구려)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발사된 게 98년 4월이었다. 같은 해 8월 북한은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 이는 계속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해외 무기시장 개척을 위한 선전효과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돈을 원하지만 동시에 폐쇄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수용하면 김정일 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대미관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는 충격으로 판을 흔들어 상황을 주도하려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PSI 참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PSI는 사실상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해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게 목적인 만큼 북한에는 전면적인 해상 봉쇄로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SI 참여는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로 묶어 놓고 PAC3이나 SM3 미사일에 대한 구매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러주는 미제 무기 구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리에게 분명 위협이다. 따라서 PSI 참여는 앞으로 숙고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 맞받아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미숙한 대응이다. 이열치열(以熱治熱)보다는 오히려 냉정하게 사태를 관찰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대화의 모색이라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실용주의적 접근일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71808075&code=990303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로켓발사 강행..韓美 "궤도진입 실패"

-- 4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이라며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일제히 "궤도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략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로켓 발사체가 '(인공위성)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추정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는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인공위성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일부 지역까지 사거리 내에 포함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확인될 경우 현재 대북 정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北로켓 발사에 경협주↑...방산주↓

-- 4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틀째인 6일 오전 현재 남북 경협 관련주는 일제히 오르는 반면 방위산업주는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북한 관련 악재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방산주가 상승하고 경협주가 추락하던 과거 모습과 다른 것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2개월여 전부터 예고된 북한 로켓 발사가 더 이상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해왔다.

경협주와 방산주의 이 같은 상반된 반응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더 이상 남북간 긴장고조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변화된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조망하는 시장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심재업 투자전략팀장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코스피지수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북한 관련 리스크는 일시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줬지만 추세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했다"며 "증시는 북한발 리스크보다

국내경제상황과 외환시장 동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 북한발 리스크는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北, 로켓 발사전 미.중.러에 통보

-- 4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발사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참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한 날(5일) 사전에 그 사실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중.러 3개국에 알린 내용은 "대략 몇시 이후 발사하겠다"는 것으로, IMO(국제해사기구)에 통고한 발사시점(4월4~8일) 보다 더욱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발사시점에 대해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미국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日, 北로켓 발미로 군비증강 나설듯

-- 4월 6일 연합뉴스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일본 열도를 발각 뒤집어놓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외부의 도발에 대비, 전력 증강 등 군사적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 일본 국민 다수는 군비 증강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 파괴하는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일본이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 상공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했다.

이번 로켓 발사 과정에서 일본의 MD 시스템이 처음으로 해상과 지상에 동시에 배치해 실전 운용됐다.

일본 국민도 그동안 정부가 1조엔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도입한 MD시스템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발미로 한 대폭적인 군비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에 관한 해석을 재검토하자는 논의도 본격화 할 가능성도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견지해왔다.

아소 총리는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익 세력들을 중심으로 점차 공공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北, 다양한 모자보건 활동

-- 4월 6일 조선일보

북한의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가 올해 산간·농촌 순회 봉사와 지역별 선전물 제작 등 다양한 '재생산건강(모자보건) 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소개했다.

신문은 협회 서현철 서기장의 말을 인용, 협회의 "모든 봉사단위들이 가족계획, 부인과질병의 검사·치료, 신생아 건강, 임신·불임 상담, 초음파 검사, 일반의료, 실험 검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7개의 이동봉사대가 교통이 좋지 않은 산간지대와 농촌의 주민들을 위주로 분기에 60~7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모자보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산건강의 다양화를 위해 봉사 가지수와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신보 "北, 몇해안에 실용위성들 발사"

-- 4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은 "앞으로 가까운 몇 해안"에 통신, 자위탐사, 기상위성 등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전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이번 "두 번째로 되는 평화적 위성발사는 조선(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역사적 계기"라며 북한이 "앞으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 고상복(62) 소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광명성 2호' 발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역사적 쾌거"라면서 "가까운 몇 해안"에 북한이 "실용적인 극궤도기상위성이나 정지 기상위성을 쏘아 올

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도 실용인공위성을 시험발사한다는 이유로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美 강경 결의안'과 6자회담' 사이

-- 4월 7일 연합뉴스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시종일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결의안 채택이라는 강경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그 궁극적인 목표가 '6자회담'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라이스 대사도 "북한을 6자 회담이라는 건설적인 협의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적 노력과 압력을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안보리)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드 부대변인 역시 "우리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협상에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는 전략적 문제"라면서 "한.미.일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유엔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한 안보리 결의가 오히려 6자회담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으로 서로 맞서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결의안과 6자회담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이유가 결의안을 포기한다기 보다는 6자회담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는 별도로 북한과의 대화 노선을 지속시키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갯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지금의 '북 로켓 도전'을 북.미 대화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하자 안보리는 6일만에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긴장국면이 조성됐지만 그달 말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되고 곧이어 6자회담이 열리는 등 국면은 빠르게 전환된 바 있다.

미국 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황도 미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나진 北 정기화물선 정상운항

-- 4월 7일 중앙일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부산항과 나진항을 오가는 북한국적 정기 화물선 '단결

봉호'는 정상 운항하고 있다.

7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단결봉호(1천592t)는 건어물, 식음료, 고사리, 버섯, 의류 등 101 TEU(1TEU는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1개)의 화물을 싣고 6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

단결봉호는 지난해 4월 부산항에 첫 입항했으며 열흘 간격으로 부산 감천항과 북한 나진항을 오가고 있다.

다만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때인 지난달에는 2주간 운항을 중단했었다.

단결봉호는 6일 오후 짐이 담긴 컨테이너 12TEU와 빈 컨테이너 118TEU를 싣고 북한으로 출항했다.

북한으로 갈 때는 폐비닐을 싣고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날 화물에는 섬유원단과 지퍼, 단추, 식료품 등이 실렸다.

단결봉호의 대리점인 국보해운 측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얼어붙어 걱정을 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단결봉호의 운항과 관련해 특별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국보해운 관계자는 "단결봉호가 북한국적 화물선이고 애초에 북측의 요구에 의해 운항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칫 로켓 발사 문제가 심각한 외교문제로 번져 운항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나진 항로에는 2007년 5월19일 강성호(1천853t)가 운항을 시작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19일 배가 비파호(1천126t)로 바뀌었다 지난해 4월8일부터 단결봉호로 교체돼 운항중이다.

[北 로켓발사 이후] PSI가입 실효성 논란

-- 4월 7일 서울신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추진,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PSI 가입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5일 오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바로 PSI 가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를 유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시 유보 이유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곧바로 PSI 참여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정부 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PSI 전면 참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유 장관 등이 6일 한 목소리로 "북한의 반응과 상관 없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 쐈기를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전후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음이 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PSI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시기나 효과 등에서 신중론에 부딪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 인터뷰에서 "PSI 가입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해결하는 자세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의 조치를 보며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6일 여야 대표 조찬회동에서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 없이 WMD 확산 등 국제 협력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며, 우리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선을 그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PSI 논란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책으로 PSI 참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PSI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단계에 꺼내들 카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회, 北로켓 해법 대북특사 공론화

-- 4월 7일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해법으로 '대북특사' 문제가 여야 가리지 않고 거론됐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을 거론하면 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특사 파견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질의서에서 "남북대화가 지연될 경우 미북대화를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의 특사를 조기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도 "정부에서 현재 대북특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사 파견이 잘 성사되면 오랜 기간 막혀 있었던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계승.실천한다는 진정성 있는 대북접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무총리급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현재의 위기국면을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장관 혹은 총리급 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의한 적이 없다"면서 "일단 10.4 선언 이행을 위한 2차 총리회

담 개최를 제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총리회담 필요성을 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남북 경색 타개를 위해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가칭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해 북한과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처럼 야당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북특사와 관련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면서 "비공개 밀사를 통한 물밑대화, 혹은 미국의 대북특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개성 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 4월 8일 노컷뉴스

북한 문화보존지도국이 개성의 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화보존지도국은 최근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인 개성의 이름난 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대상으로 선정된 유적은 왕건왕릉, 공민왕릉, 개성남대문, 고려성군관, 송양서원, 선죽교, 표충비, 만월대, 개성성, 대흥산성, 관음사에 이어 추가로 민속거리, 칠릉떼, 명릉떼, 개성침성대가 문화유산 등록 대상으로 선정됐다.

북한에는 2004년 중국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동명왕릉, 약수리벽화무덤, 덕흥리벽화무덤, 강서세무덤, 안악3호무덤 등 63개의 고구려 벽화무덤이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개성기업 통행차단 피해 보험적용 추진

-- 4월 8일 mbn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차단 등으로 물자 반·출입을 못하게 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유사시 물자 반·출입 지연·차단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규정 손질 등 작업이 필요해 현재 검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교역보험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자 반·출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6者 틀내 북미 미사일회담 지지"

-- 4월 8일 헤럴드경제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와 별도로 이후 재개될 북핵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 간에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이유로 6자회담을 거부하려는 명분을 없애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 아파트 10만 가구 건설' 스타트

-- 4월 9일 노컷뉴스

북한 당국이 오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양시 주택 10만 가구 건설공사를 이미 착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9일 "북한 당국이 강성대국 건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양시 살림집(아파트) 10만 가구 건설은 평양수도건설총회사가 전담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난해 봄부터 시작한 중구역 보통문 일대에 아파트 건설이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평양건설총회사가 이미 건축 자재 등을 공급하는 관련부서를 통합하고 평양시 낙랑구역에 5만 가구, 만경대구역에 3만 가구, 나머지는 2만여 가구는 대성구역 등지에서 착공해 오는 2012년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건설총회사는 최근 김정일 와병설 이후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행정부장이 직접 맡아 대남, 대외 종합무역회사의 역할도 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이전에는 평양시 주택 10만가구 건설공사를 남측의 자본과 건설회사의 참여도 기대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일부 건설업체들은 평양시 아파트 10만 가구 건설 사업과 평양 시내 기존 낡은 주택의 재건사업(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고 이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검토 중에 있으나, 최근 남북관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北, 개성근로자 올들어 2천여명 신규공급"

-- 4월 9일 조선일보

통일부는 9일 올들어 현재까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가 2천명 이상 신규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천273명의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신규로 공급됐다”고 소개했다. 신규 공급된 인력은 대부분 공단 내 생산업체들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근로자를 포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총 3만9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올들어 2천명 이상 추가 투입됐음에도 작년 12월말 3만8천931명이었던 북측 근로자의 순증 폭이 그에 못미치는 것은 작년 말 이후 공장을 신축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관계로 건설 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헛갈리는 대북 정책...혼선 초래

-- 4월 10일 조선일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5일)를 전후한 정부의 대북 대응이 혼선을 빚고 있다. 대북 특사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 등을 놓고 강온책(強穩策) 사이를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얼마 없는 대북 지렛대의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수용한다면 특사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북 특사 파견은 현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여당 의원들까지도 “대북 특사를 보내는 거냐”고 묻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현인택 장관), “대통령 발언은 원론적 수준”(청와대 관계자)이라며 뒤늦게 발을 빼고 있다.

PSI 정식참여 문제도 정교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비확산·테러방지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초 “로켓 발사 후 즉시 PSI 참여를 선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스스로 ‘PSI=로켓 보복대응’이라는 북한의 선전 프레임에 말려든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상관없이 PSI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된 뒤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로켓 발사 후 PSI 참여 시기를 “며칠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대북 대응 논의 결과 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대북 특사를 보낸다는 건지 아닌지, PSI에 참여한다는 건지 아닌지 북한도 헛갈릴 것”이라며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장성택 국방위원에

-- 4월 9일 연합뉴스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2인자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에 처음으로 선임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김정일 제3기 체제가 공식출범했다.

회의에선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로 그의 매제이자 권력 2인자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포함해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의 주역인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국방위원에 새로 '선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도 국방위원에 선임돼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회의는 김영일 총리를 유임시키고 각료급 일부를 개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정운이 국방위원회에서 후계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후계구도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北, 내각서 민경협 제외...경색장기화 예고

-- 4월 10일 조선일보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알린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결과가 남북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의 정운업 전 위원장이 비리혐의로 낙마해 공식임에도 새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이 기구를 내각에서 제외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비취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작년 대남 경제협력을 통합관리해온 내각 산하 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기는 등 대남 경협기구

와 조직을 축소·개편했다는 소문이 제기됐는데, 이번 회의 결과는 그 소문에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10일 “2004~5년께 국내의 보수층에서 북한 군부가 실질적으로 대남 경협사업을 관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북은 그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내각에 장관급 조직으로 민경협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민경협 창설은 남북경협을 공식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데, 내각에서 뺀 것은 북이 남북 경협 확대에 별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의 북미협상 전개 과정에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남북간 냉각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 올해 예산은 5.2%증액된 34.5억 달러로 추산

-- 4월 10일 헤럴드경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올해 예산수입 계획이 지난해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5.2% 증액됐다고 9일 밝혔다. 미화로는 34.5억 달러, 북한돈으로는 4826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신임 김완수 재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예산결산과 올해 예산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수입계획이 지난해보다 5.2%, 지출계획이 7%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6% 더 많았으며, 지출은 99.9%가 집행됐다고 말했다.

김 재정상은 세원에 대해 중국의 기업소득세와 유사한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을 5.8% 늘려 편성하고 협동단체이득금 수입은 3.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은 6.1%, 부동산사용료 수입은 3.6%, 사회보험료 수입은 1.6% 늘려 잡았다.

지출계획의 경우, 작년에 비해 도시경영부문 지출을 11.5%로 대폭 늘렸고 ‘인민경제 선행부문(금속, 석탄, 철도운수 등)’에 8.7%, 교육부문 8.2%, 보건부문 및 과학기술 부문 각 8%, 농업부문 6.9%, 체육부문 5.8%, 경공업부문 5.6%, 문화예술부문 3.2% 늘렸다.

또한 북한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예산의 15.8%를 책정, 북한돈 762억5000만원(5억 4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국방위원회, 후계체제 견인하나

-- 4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통해 출범한 김정일 3기체제는 한마디로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

위원회를 후계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정운의 세습후계체제 구축 준비를 도맡은 김 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처음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한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10년간 노동당 말단 직책에서부터 후계수업을 쌓은 김 위원장과 달리 정운은 나이가 26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치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후견자 없이는 후계자 위상을 굳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운을 후계자로 제정한 '믿을 수 있는' 장 부장을 국방위원회에 앉히고 다른 국방위원과 군부 요직을 '장성택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장 부장을 중심으로 정운의 후계체제를 안착시키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2월 국방위 부위원장에 오극렬,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군 총참모장에 리용호를 임명했고, 박명철 전 체육지도위원장을 국방위 참사로 임명하는 등 국방위의 구성원과 군부 인사를 단행했고 이번 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새로 선출된 인물 중 우동측은 장 부장 휘하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사실상 수석 부부장으로, 부장과 제1부부장이 공석인 보위부를 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면서도 김정운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장성택과도 절친한 '장성택 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정일 3기체제는 장성택 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원회가 주축이 돼 빠르면 강성대국 건설 목표해인 2012년까지 김정운 후계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언론매체들이 아직 개정 헌법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은 이러한 목적의 국방위원회의 기구 개편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방위가 김정운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노동당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기구로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현재 아무런 공식 직책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운이 국방위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아 후계수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노동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공고화했다면 김정운은 국방위원회에서 직책을 맡아 국방위를 주축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와 달리 내각은 전승훈 부총리가 오수용 전 전자공업상으로 교체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평양시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수도건설부가 내각에 새로 생겨 눈길을 끌었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2004년 업무정지 처벌에서 풀려나면서 새로 생긴 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의 제1부부장을 맡았었는데 그가 행정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내각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들로 인해 김정일 3기체제에서는 장성택 부장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장 부장이 국방위 진임을 통해 앞으로 대외, 대남 사업 등 외교 전반도 직접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그는 오바마 미 행정부와 대화와 협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해외투자를 이끌어내 경제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北, 11년만에 헌법 개정

-- 4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전하지 않았다.

"남·북·중 3각경협 한국에 새 블루오션"

-- 4월 10일 중앙일보

한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남·북한과 중국간 3각 경제협력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을 이 3각 경제협력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남북 교역업체인 ㈜드림이스트의 이종근 대표는 10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남·북·중 경협에 관한 토론회에서 3국간 경협 모델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중국의 유연탄과 곡물을 남한으로 운송할 경우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밖에 관광, 제철, 의류·공공 협력 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서두현 통일부 경제분석과장도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내부만의 발전전략으로는 지속적·안정적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북한과 중국의 가치에 주목해 통일시대 개척과 세계

시장의 통합 및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태연 명지대 교수도 남북간 경협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변수이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엔 신의주-단둥 등 양국간 변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경협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경색 국면에서도 북한의 개성을 포기하기 보다는 단둥을 개발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한 뒤 남한까지 엮어 삼각무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北 대의원중 노동자 비중 30%서 10%로 격감

-- 4월 10일 중앙일보

직업별로 보면, 10, 11기때 각각 31.3%, 33.4%로 3분의 1가량 차지했던 노동자 출신 대의원이 12기때는 10.9%로 격감했다.

이에 비해 12기 대의원중 군인 비율은 16.9%로 노동자 대의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북한의 '선군정치'를 반영했다. 다만 10, 11기 때는 군인 비율을 발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군인 비중의 증감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농업인인 협동농장원의 비율은 10, 11기 모두 9.3%였고 12기에서도 1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 로켓 두뇌집단, 김책공대서 양성

-- 4월 10일 노컷뉴스

북한이 로켓발사와 관련된 두뇌집단을 양성하기 위해 평양 김책공대에 수재들로 구성된 전문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0일 "북한의 국가정책 따라 우주공학인재 양성은 지난 90년 김책공대에 병설된 단과대학인 기계과학기술대학 우주항공공학과에서 평양시와 각 도에 있는 제1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골라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김상운 교수는 "국산로켓 은하-2호에 의한 광명성2호의 성공적 발사가 우연이 아니라"면서 "우주항공공학과에는 대학 수재반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공학수재반을 운영해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향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재반의 학생들은 자기가 학부, 학과를 선택해 배우지만, 공학수재반 학생들은 대학측에서 전공 과목이 제시되고 4년 동안의 대학과정을 마치면, 박사원에서 계속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주항공공학과는 김책공대 재료공학부나 기계과학대학 분사식학과 등 다른 학부, 학과들과 긴밀한 연계해 최근에는 내열성합금재료(티탄합금, 몰리부덴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유엔에 '인공위성' 미통보

-- 4월 10일 중앙일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의 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관련 통보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로켓발사에 앞서 준비작업의 하나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에정일과 시간 등 관련자료들을 지난달 11일 통보했지만, 인공위성과 관련한 우주 관련 조약에 따른 사후통보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기권조약은 제11조에서 '당사국은 외기권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데 동의한다(agree to)'고 규정하고 있고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제4조에서 '발사국, 발사일시, 발사지역, 발사위치, 기본 궤도 요소,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 발사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고, 국가들은 보통 인공위성을 발사하고서 한참이 지난 사후에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라 유엔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 대북제재 1년 연장 각의 의결

-- 4월 10일 중앙일보

일본 정부는 10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등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던 현행 대북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 액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추가 제재는 미사일 발사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북한이 지난해 일본과 약속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번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다 추가 제재의 효과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가제재와 관련,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액을 현재 3천만엔 초과에서 1천만엔 초과로 확대하고, 북한 방문자가 엔화를 가져갈 때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

준을 현재의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역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주 중에 송금 보고 의무액 등을 반영한 정부령을 마련할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 왔던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는 일단 보류했다. 이는 일본의 대북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8억엔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북한 로켓발사에 한 목소리 내기로

-- 4월 11일 헤럴드경제

한국과 중국,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11일 합의했다.

당초 예정됐던 '아세안(ASEAN)+3' 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것으로, 향후 3국간 공조체제 구축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김 부대변인은 "3국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에 단합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과 문안은 유엔 안보리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6개국, 對北 의장성명 채택합의

-- 4월 12일 노컷뉴스

유엔 안보리 주요 6개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존 소여스(John Sawers)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2시간 가까운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장 성명 채택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스 유키오 일본 대사도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성명에 합의했다고 말해 일본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 채택을 수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안보리 의장 성명은 구속력을 갖는 제재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성명 초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위원회가 자산동결등의 조치를 취할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구체적

인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물질 거래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자산동결과 여행제한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제재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었다.

성명 초안에는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 감축 조치 해제

-- 4월 12일 아주경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시행한 개성공단 체류 인원 감축 조치를 일단 해제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내일부터 개성공단 방문 및 체류 인원에 대한 인위적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북 인원 등은 입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이상이 생길 개연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5일 로켓 발사를 계기로 당분간 평일 1100명 안팎이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수를 7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12월 공단 상주 인원을 대폭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북의 '12.1 조치'로 체류 인원을 30% 이상 줄인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인력 추가 감축은 공장 가동에 큰 타격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북 로켓 일시적 우주 진입" 미 항공우주지 분석

-- 4월 12일 한겨레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미국과 일본이 애초 추정했던 거리보다 약 800km 더 날아갔으며, 일시적으로 우주에 진입하기도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온라인 항공우주 전문지인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spaceflightnow.com)는 11일 레이더 추적 자료와 미 공군 방어 지원프로그램(DSP)의 미사일 경고 위성이 보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로켓은 미국과 일본이 추정 발표한 1900마일(3058km)보다 먼 2390마일(3846km) 지점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예고했던 낙하 지점과 거의 일치한다.

이 전문지는 "북한 로켓의 2단계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우주까지 올라갔으나, 3단계 고체연료 추진체가 2단계에서 적절히 분리돼 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대기권으로 서서히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국방부는 처음에는 2단계 연소에서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제는 2단계가 초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대로 작동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PSI전면참여 주내 발표할듯

-- 4월 12일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주내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오는 14일(한국시간)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PSI전면참여를 통해 비확산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에서의 의장성명 채택 과정을 지켜본 뒤 조만간 PSI전면참여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주내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미 PSI 전면참여 방침은 정해졌다"면서 "14일 새벽에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며칠 시차를 두고 PSI전면참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채택될 의장성명에서 이행을 촉구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돼 있는 만큼 PSI전면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After Latest Brinksmanship, Engaging North Korea

최근의 벼랑끝전술 이후, 북한 문제에 관하여

-- 4월 6일 CFR

출처 http://www.cfr.org/publication/19044/after_latest_brinksmanship_engaging_north_korea.html?breadcrumb=%2Findex

North Korea reported a successful satellite launch into orbit on April 5, whic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suspected was a cover for a long-range missile test. The UN Security Council held an emergency meeting but failed to reach immediate agreement (LAT) on an international response as Russia and China urged restraint. CFR Senior Fellow for Japan Studies Sheila A. Smith says Pyongyang is "clearly bent on acquiring a delivery capability that would make their nascent nuclear program more effective." She says Washington must pursue diplomacy through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rough the Six-Party Talks "to reassure North Korea that diplomacy is what we are intent on but also to reassure North Korea that it doesn't really have any other options but to proceed in the conversation with us....."

북한이 4월 5일 성공적인 위성발사에 성공하여 궤도에 진입했음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의심하고 있다. UN 안보리가 즉시 개체되어 국제 제재를 논의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자체를 주장함으로써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CFR의 일본학 선

임연구원 Sheila A. Smith는 “북한은 명백히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보다 유효하게 만들 (탄두) 전달 능력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미 행정부는 북한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6자 회담”과 병행하여 동북아 동맹국들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외교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를 통한 진전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North Korea's Kim tightens grip on power 북한의 김정일이 권력을 강화하다

-- 4월 9일 UPI

출처 http://www.upiasia.com/Politics/2009/04/09/north_koreas_kim_tightens_grip_on_power/4826/

Seoul, South Korea —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ek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rocket launch last weekend, the reclusive country is fanning a festive atmosphere by staging a massive loyalty rally to mark the beginning of Kim Jong Il's third term as ruler.

Kim, who is thought to have suffered a stroke last summer, had himself re-elected to another five-year term on Thursday 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country's top control tower.

The country's parliamen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upheld" Kim, 67, as chief of the military body that oversees the country's 1.2 million-strong military, the backbone of his iron-fisted rule and "songun" (army-first) politics, according to the North's state media……

북한의 지난 주말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색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는 충성 퍼레이드가 열리는 등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작년 여름 심장 발작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김정일은 목요일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새로운 5년간의 체제로 재선출되었다. 북한의 국영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67세의 김정일을 120만의 강군과 철권통치와 선군정책의 근간인 군부 지도자로 추대하였다……

ミサイル発射、議長声明で收拾も 日米目指す決議は困難か 米사일 발사, 의장 성명으로 마무리 일·미가 목표로 하는 제재 결의는 어려운가?

-- 4월 9일 교토통신

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問題で、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常任理事国5カ国と日本は9日夜（日本時間10日午前）、6日以来となる協議を行った。国連外交筋によると、中国は9日までに、日米が採択を目指す決議案より格下の議長声明の原案を日米に初めて提示。ライス米国連大使は協議後、最終的な合意は得られ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

決議案採択については、日本以外の各国からも困難と指摘

する声が相次いでおり、最終的に議長声明で事態收拾が図られる可能性も出てきた。

外交筋によると、中国の議長声明案はミサイル発射に「遺憾の意」を表明。2006年の北朝鮮の核実験後に採択された安保理決議1718を確認するなどの内容。

5日に始まった協議で、日米は安保理決議1718「違反」を指摘、同決議の定めた制裁強化を盛り込んだ新決議案の採択を求めた。

常任理事国として拒否権を持つ中国は拒否する姿勢を崩さず、日米は決議案の内容を弱めるなど妥協案を検討。しかし、中国は妥協の姿勢を見せず、9日までに、日米に対し議長声明原案を示したという。中国はそれまではさらに格下の報道陣向け声明を主張していた。

一方、伊藤信太郎外務副大臣が9日、ニューヨーク入りし、中国やロシアの各国連大使らと相次いで会談、決議案への支持を求めた。

安保理議長国メキシコのヘラー国連大使との会談後、発射が過去の安保理決議違反に当たるとの「同意を得た」と説明。「安保理が採択した決議がメンバーに破られるのを看過するなら、安保理そのものの存在に疑問が出てくると申し上げた」と述べた。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일본은 9일 밤(일본시간 10일 오전), 6일째 협의를 계속했다. 유엔 외교 당국에 의하면 중국은 9일까지 일·미가 채택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보다 낮은 수준의 의장 성명의 초안을 일·미에 처음으로 제시. 협의 후, 라이스 미국 UN대사는 최종적인 합의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일·미가 추진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곤란하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어 의장 성명으로 최종적인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 당국에 의하면 중국의 의장 성명 안은 미사일 발사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2006년의 북한 핵실험 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확인하는 등의 수준.

5일 시작한 협의에서 일·미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을 지적, 동 결의가 정한 제재를 강화한 신결의안의 채택을 요구했다.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이 있는 중국은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일·미는 결의안의 내용을 낮추는 타협안을 검토. 그러나 중국은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9일 일·미에게 의장 성명 초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중국은 이보다도 한층 낮은 수준인 보도진을 위한 성명을 주장하고 있었다.

한편, 이토 신타로 외무 부대신은 9일 뉴욕에 도착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의 UN대사들과 연달아 회담하며, 결의안 지지를 요구했다.

추천 논문

글로벌 경제위기 하의 남북 경협 방향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는 물론, 최근의 한반도 긴장고조로 남북경협과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과 남북경협, 외자 유치 등을 고려한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GDP 대비 약 20%에 불과하여 한국의 81.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폐쇄성으로 인해 서방국에 비해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전체의 약 80%에 육박하고 있어 북한에게는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달러로 중국에서 식량 등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입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환경 영향은 글로벌 경제위기 자체보다는 중국 및 남북관계, 북핵과 북미관계 진전 여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2009년 북한 경제는 지난해 일시 회복 조짐을 보였던 것과 달리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새로운 고용 창출 등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와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의 긴장 고조가 계속된다면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까지 겹쳐 한국 경제는 회복 지연은 물론 침체가 중장기화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 요인의 최

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로켓 발사 후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복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 6·15 및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경협 업체의 일시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을 '퍼주기' 개념의 비용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편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경협은 현 경제위기 탈출의 돌파구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개념의 편익도 동시에 제공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 회생 지원과 인권 정책인 동시에 남한의 복지 정책인 셈이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협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일부를 산업자금화 혹은 통일기금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 금액에 한해 자금 출처 확인이 면제되는 장기 저리의 무기명채권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할만하다.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와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국제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4.jsp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北, 아리랑 공연 관람료 두배 인상키로

○ 북한이 해마다 8월부터 시작하는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관람료를 올해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고려관광'의 사이먼 카커릴 대표는 "오는 8월 초에 다시 시작되는 아리랑 공연의 관람료가 40~80유로에서 80~240유로로 두 배 올랐다는 통보를 북한으로부터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北, 故김일성 생일 5일 앞두고 행사준비 '분주'

○ 북한의 故김일성 주석 97회 생일(4.15) 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가 계속 열려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주석의 생일 기념으로 열리는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중국과 러시아, 폴란드, 몽골 등 30여 개 예술단과 교예단, 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했다.